

주요 동향(1) : 과학기술

1 백악관, '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' 발표

➔ 미국 백악관은 미래 AI 입법의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, 미국 내 일관된 AI 규제 체계 마련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 권고안인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*를 발표(26.3)

* National AI Legislative Framework

● 프레임워크는 미국 내 통일된 AI 안전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, 각 주(州)가 자체적으로 AI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

- 지난 '25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'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정책 체계 확립 행정명령(EO 14365)*'에 따른 후속 조치

* 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('25.12.11.) : 주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 정부 중심의 국가 AI 정책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

- 주정부별로 상충되는 AI 규제가 난립하면 혁신이 저해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이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

- 신기술인 AI에 뒤따르는 정책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, 주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임이라고 강조

● 향후 미국 내 AI 입법 활동의 이정표가 될 6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면서 의회에 행동을 촉구

1. 아동 보호 및 부모 권한 강화

- 부모에게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(계정 통제권 등)를 제공

-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AI 플랫폼에는 사용자 연령 인증 기능 및 아동 성 착취나 자해 조장을 방지하는 기능을 의무화

- 기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AI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, 아동 성 착취물(AI 생성 이미지 포함) 금지 조치 등 주정부의 기존 아동 보호 관련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

2. 미국 커뮤니티 보호 및 강화

- AI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지배력(energy dominance*)을 달성함으로써 미국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

* Energy dominance : 단순한 에너지 자립(Independence)을 넘어 미국산 에너지를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

- 데이터센터 비용이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, 데이터센터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전력망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AI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
- 취약계층을 겨냥한 AI 기반 사기 행위에 대응하고, 최첨단 AI 모델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방 정부 역량을 강화
- 산업 전반에 걸쳐 AI 도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보조금, 세금 혜택, 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

3. 지식재산권 존중 및 창작자 지원

- 창작자의 권리와 창작물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동시에, AI 발전을 위해 ‘공정 이용^{*}’을 보장하는 접근방식을 추구
 - * Fair Use :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 개념으로, 저작물을 통한 AI 모델 학습에도 공정 이용의 논리를 적용함을 의미
- 구체적으로, 저작물을 통해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보장
- 개인의 음성, 초상,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개인 속성을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‘디지털 복제물(Digital Replicas)’의 무단 배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연방 법률 제정을 고려

4.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호

- 표현의 자유 및 수정헌법 제1조^{*}를 수호하고, AI 시스템이 검열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며, AI가 진실성과 정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
 - * First Amendment : 종교의 자유와 표현·언론·집회·청원의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
- 특히 AI 업체가 이념적 또는 당파적 이유로 임의로 콘텐츠를 금지·강제·변경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,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

5. 혁신 활성화 및 AI 패권 확보

-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, 모든 산업 부문에 AI 도입을 가속화하며, 세계적인 수준의 AI 시스템을 개발·배포하는 데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
- 특히 AI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
- 연방 정부 차원의 AI 규제 기구를 신설하는 대신, 기존 규제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AI를 감독



6. 교육 및 AI 인재 양성

- 인력 개발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기회를 확대하고, AI 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
- 이상의 6가지 입법 목표와 별개로, 주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AI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
 - 과도한 부담을 주는 AI 규제법이 미국 50개 주별로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고,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관된 국가 표준을 마련
 - 단, 아동보호·사기 방지·소비자 보호 등 기존 일반법 집행 권한, 주 정부의 AI 조달·활용 규정, AI 인프라 입지를 결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권한 등에 있어서는 주의 재량권을 인정
 - 주정부가 연방 정부가 다루기에 더 적합한 영역을 규제하거나, 세계 AI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 행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
 - 구체적으로, 주정부가 AI 개발을 규제하거나, AI 사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,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AI 개발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저지
-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향후 수개월 내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구상을 대통령 서명이 가능한 법안으로 만들어 연내에 법제화할 방침

출처 : 미국 백악관 (2026.3.20.)

<https://www.whitehouse.gov/wp-content/uploads/2026/03/03.20.26-National-Policy-Framework-for-Artificial-Intelligence-Legislative-Recommendations.pdf>

<https://www.whitehouse.gov/releases/2026/03/president-donald-j-trump-unveils-national-ai-legislative-framework/>

<https://www.cnbc.com/amp/2025/12/11/trump-signs-executive-order-for-single-national-ai-regulation-framework.html>